2014년도 고용노동부 4대 정책목표

# 함께 일하는 나라, 행복한 국민!

현장중심 실천, 희망찬 변화!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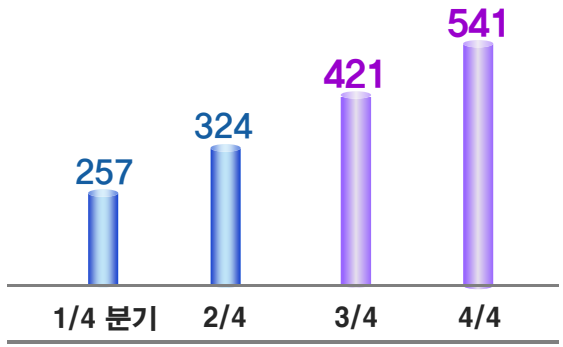
# 지난 해는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모멘텀 확보

『노사정 일자리협약』(5.30) 을 바탕으로 『고용률 70% 로드맵』 수립(6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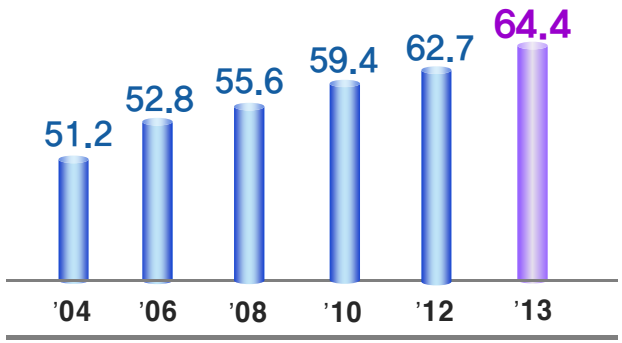
* 고용 창출 패러다임 전환: 남성·제조업·대기업 중심 ➡ 여성·서비스업·중소기업 중심

##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 뚜렷, 상용직 비중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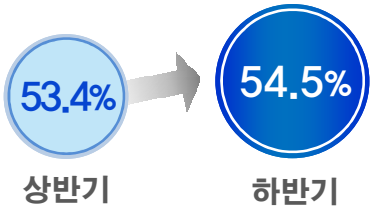
* '13년 취업자 증감 (천명, 15세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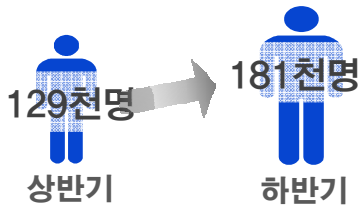

* 연도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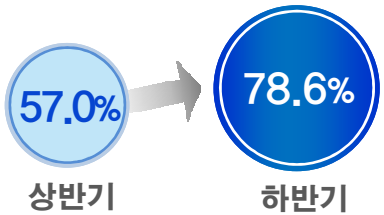

### 여성 고용률(15~64세)




###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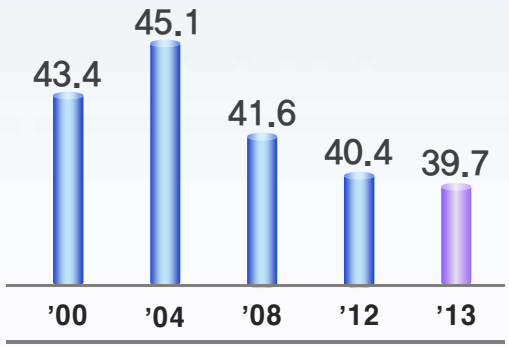

### 취업자 증가분 중 중소기업 비중



#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2차년도 남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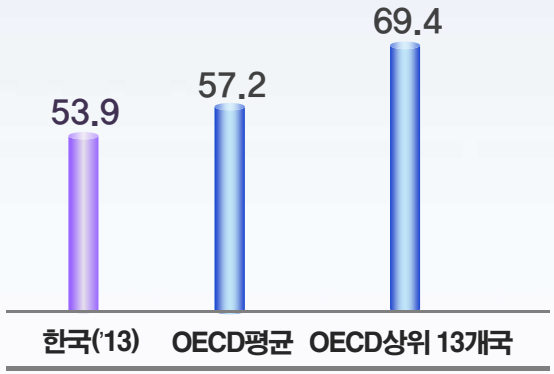
## 1 청년 취업의 애로 지속

* 청년 고용률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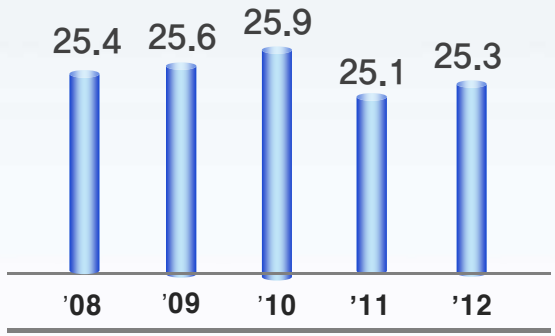

## 2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

* 여성 고용률 (%, 15~64세, '12년)




## 3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

* 중위 임금의 2/3미만인 근로자 비율(%)




## 4 경제·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

* 비합리적 임금체계, 장시간근로, 대립 · 갈등의 노사관행 등

**올 한해 4대 남은 과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**

# 2014년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

##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

### 정책목표 1
**청년, 일 할 기회 늘리기**

- 전략 1 직업교육·훈련 혁신
- 전략 2 능력중심 채용·인사관리
- 전략 3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조성
- 전략 4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

### 정책목표 2
**여성, 맘껏 능력 발휘하기**

- 전략 5 일하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
- 전략 6 맞춤형 재취업 지원
- 전략 7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

### 정책목표 3
**저소득층, 일을 통한 복지 확충**

- 전략 8 고용·복지 융합서비스 확산
- 전략 9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
- 전략 10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

### 정책목표 4
**새로운 미래를 여는 '新고용노동시스템' 구축**

- 전략 11 사회적 대화를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

정책목표 1

# 청년, 일할 기회 늘리기

- 전략 1 직업교육·훈련 혁신
- 전략 2 능력중심 채용·인사관리 확산
- 전략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
- 전략 4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

# 주요 성과

## 능력중심 사회로의 토대 마련

### 254개「국가직무능력표준」개발·활용

| | |
|---|---|
| 직업교육 | 3개 시범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 |
| 직업훈련 | 공공훈련 우선 적용, 민간 61개 직종 적용 |
| 자격제도 | 자격시험 출제기준 등 개편 |

### 「일·학습 병행제도」도입

› 45개 희망 기업에 시범 적용(12월)

"고교 내신 1등급 학생도 지원하고, 11:1 경쟁률로 우수인재가 많아 계획보다 더 많이 채용했습니다"

* 일 · 학습 병행제도 도입 기업의 인사담당자

### 「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」보급 (30개 기업)
### 8개「스펙초월 멘토스쿨」운영 (240명 지원)

##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기반 확충

###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추진

› 숙련·보상·정보의 3대 불일치 원인 해소

### 「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」도입

›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(5월)

↘ 정원의 3% 이상 청년 고용 ('14~'16)

### K-Move 사업 ➡ 해외취업 지원

› K-Move 센터 구축 (미국·일본·인니)

* 현지 네트워크 활용, 일자리 발굴

### 강소기업 DB 구축·제공 (9,752개소)

# 장애 요인

## 청년·학부모의 인식과 노동시장 현실의 괴리

"한국에서 대학 안 나오면 성공 못합니다.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합니다."

* 고교 학부모

V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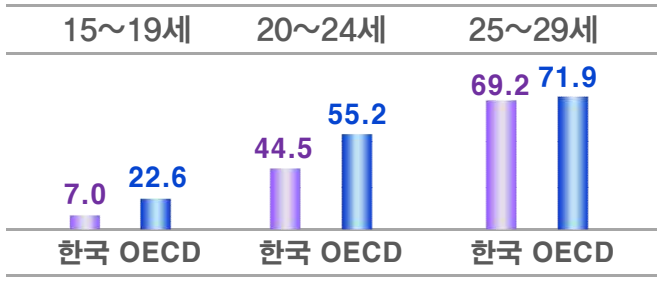
**향후 10년간**

- 고졸 32만명 부족
- 전문대 이상 50만명 초과

* 중장기인력수급전망

문제의 핵심

## 15~24세의 낮은 고용률




## 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교육·훈련

› 독일·스위스와의 차이

| | |
|---|---|
| 학 교 | 교실에서만 교육 |
| 기 업 | 인력양성을 학교에만 의존 |
| 산업계 | 인력양성 역량 부족 |

##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

"왜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"

* 대학졸업생

**중소기업 3低 문제**

- 임금: 대기업의 66.7%
- 복지: 대기업의 52.6%
- 장래성: 중소기업 취업 기피요인 1위 (35.2%)

# 중점 추진계획

## 전략 1 직업교육·훈련 혁신 (NCS 활용)

독일·스위스에 버금가는 훈련체계를 위한 **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** 수립

### 학교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

- 조기 직업체험 지원
  - 자유학기제 연계 (교육부 협업)
- 교과서 개편 ➡ 편견 해소
  - 「진로와 직업」 교과 선택 학교 확대 (교육부 협업)
- 학생·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 ('14년 5천명)

### 청년의 조기 취업을 위한 先취업 後학습 확산

- (기업) 일·학습병행제 본격 확산
  - '14년 1천개 ➡ '17년 1만개
- (학교) 현장실무 중심 훈련 전환
  - 교과 개편, 교원 기업현장 연수
  - 폴리텍(시범) ➡ 특성화고·전문대
- 일반계고 학생(45백명) 및 청년 선호 분야(문화콘텐츠)로 확대

### 지역 · 산업수요 맞춤형 훈련 체계 구축

- 지역 산업계 공동 인력수요조사
  - 14개 지역HRD위원회 활용
- 고숙련·고품질 교육훈련
  - 훈련비 규제 완화, 성과평가 강화
- 업종별 인력개발협의체(SC) 육성
  - 교육·훈련·자격 직접 설계·평가

인프라

**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개발 완료, 품질 관리, 공감대 확산**

# 전략 2 능력중심 채용 · 인사관리 확산

## 스펙초월 채용 확산

- 「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」 확산
  ('13년 30개 → '14년 180개 기업 적용)
-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
  - 10개 스쿨, 500명
  - 성공모델 발굴 → 사회전반 확산

##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

- 10대 공공기관 도입,
  우수사례 발굴 ➡ 민간 확산
- 숙련기술인 존중 문화 구축
  - 「숙련친화성지표」 개발
    및 우수기업 우대

**K-HRD 3.0시대**

**지역·산업 맞춤형 인적자원개발**

- 1.0: 훈련 공급자 중심
- 2.0: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중심
- 3.0: 기업과 훈련생 쌍방향 맞춤형

## NCS를 토대로 국가역량체계(NQF) 점진적 도입

NQF

훈련·경력·자격 ⇄ NCS ⇄ 학위

학위·학벌없이도

채용·보수·승진 등에서 동등 대우

- NCS를 훈련기준·자격 출제기준·경력 산정 등에 적극 활용

# 전략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

##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

-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패키지 지원
  - '14년 11개 산단(고용·문화·산업·교육부 협업)
    - 산재예방시설 (100억), 편의시설(52억)
    - 공동 어린이집 (100개소)
    - 문화복지공간 확충 (100억)
    - 지역 맞춤형 일자리 (훈련, 50억)
-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
  - 기숙사 등 공동복지시설 매칭 지원

## 중소기업근로자 재산형성 지원

-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
  -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보장
  -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
-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
  - 우리사주 손실보전·대여 제도 도입
  - 우리사주 스톡옵션제도 개선 (매수기회 확대 등)

##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강화

- 청년인턴제도: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개편
  - 정규직 전환시 취업지원금 확대 (200만원 ➡ 220만원)
- 뿌리산업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

## 강소기업 정보를 더 생생하게

- 지역 · 업종별 강소기업 DB 확충 · 개편
- 청년 서포터즈(500명)가 기업 방문
  - 재무구조 등 경영상황, 근무환경 등 현장 정보 수집·제공 (동영상 등)

# 전략 4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

## 전략산업 분야 고용창출 적극 지원

- **유망 전략산업 분야 고용창출 지원** (산업·미래부 협업)
  -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심
    - * 보건·의료, 관광, 소프트웨어 등
  - 신규 채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(청년은 2년)
    - * 창업 후 6개월~5년 미만 기업
- **전략산업에 맞는 융합인재 양성**
  - 전략산업별 수요조사 ➡ 훈련계획 수립 ➡ 채용연계 장기 고급훈련과정 지원
    - * 업종별 인력개발협의체(SC)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

## 양질의 해외취업(K-Move) 본격 추진

- **괜찮은 해외 일자리 발굴 시스템 구축**
  -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
    - * K-Move센터('14년 중국 등 7개국), 한인회 등
  - 해외 진출기업 현지 일자리 발굴
    - * 산업·미래부, 중기청 등과 TF 운영, 수요 파악
- **해외적응 잘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**
  - K-Move스쿨 등에서 멘토 노하우 전수
    - * 청년 2,200명 훈련, 멘토 확대 (100 ➡ 200명)
  - 취업연계형 해외인턴제 신설 (700명)
- **해외 통합정보망 구축** (외교·교육·산업부 등 협업)

정책목표 2

# 여성, 맘껏 능력 발휘하기

- 전략 5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
- 전략 6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
- 전략 7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

# 주요 성과

## 육아

### 육아휴직 활용도 증가

| 육아휴직자 | 58,137명 | 64,069명 | 69,616명 |
|---|---|---|---|
| | '11년 | '12년 | '13년 |

## 보육

###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 보육 지원

- 설치지원 한도확대 (단독 2➡ 3억, 공동 5➡ 6억)
- 직장어린이집: '12년 523개 ➡ '13년 619개

## 시간선택제

### 공공·민간 공감대 확산, 일자리 창출 본격화

-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
  [공공] 공무원 · 공공기관 채용 계획 발표
  [민간] 채용박람회 개최, 184개 기업 11,500명 채용
-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('13년)

| 임금상승률 | |
|---|---|
| 전체 | 3.7% |
| 시간제 | 7.7% |

| 사회보험 가입률 증감 | |
|---|---|
| 고용보험 | 2.3%p ↑ |
| 국민연금 | 1.3%p ↑ |
| 건강보험 | 3.3%p ↑ |

## 재취업

###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(120개)

## 전환의 모멘텀 마련

### 여성 고용률 상승

| '12년 | '13년 |
|---|---|
| 53.5 | 53.9 |

### 취업자 증가 ('13년)

| 남 | 여 |
|---|---|
| 186천명 | 200천명 |

# 장애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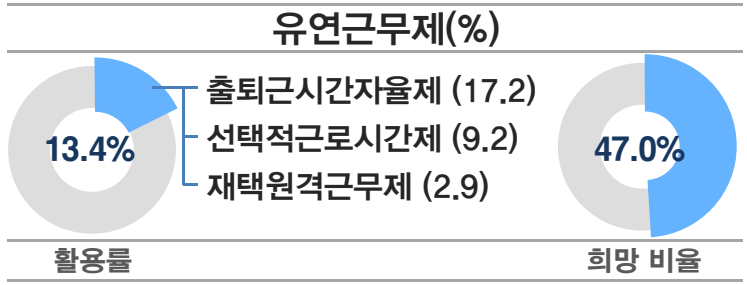
아직도 "경력단절 여성, 195만 5천명"

- 육아는 **여성의 몫**이라는 편견, **기업의 낮은 모성보호 인식·문화** 여전
  - › 여성취업 **장애 1위는 육아부담** (46.6%)
    - ·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('13년): 3.3%

모성보호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(소위) 사내눈치법이에요.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여 신청이 어려워요

-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싶어도 **시간선택제 전환 제도가 없는 기업** 상당수
  - · 취업여성 3명 중 1명이 시간제 전환·이직 의사 有 ('13.11월, 500명, 고용부)
  - › **퇴직금 등 불이익 우려**로 망설임

-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**인사노무관리 어려움** 등으로 활용 미미




- 기업은 **적합직종 발굴 어려움, 비용부담** 등으로 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
  - › 미도입 사유 ('14.2월): 적합직무 부족 38.0%, 생산성저하 28.5% 등

- 경력단절 유형별 **맞춤형** 고용서비스 **부족**
  - › 경력단절 여성 중 직업훈련 경험자: 1.4% ('13년)

# 중점 추진계획

## 전략 5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

### 맞벌이부부 중심 육아 지원

- **아빠 육아휴직 활성화**
  -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
  -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상향 (통상임금 40 ➡ 100%)
- **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확대**
  ('13년 10개소 ➡ '14년 20개소)
- **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상향**
  (만 6세 ➡ 만 8세)

###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

- **육아기에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토록 개편**
  -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

| | | |
|---|---|---|
| 육아휴직만 쓰는 사람 | ➡ | 최대 12개월 |
|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사람 | ➡ | 최대 24개월 |

* 현재: 근로시간 단축 + 육아휴직: 최대 12개월
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
    (통상임금 40% ➡ 60%)
- **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**

# 전략 6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

## 30대 고학력 여성 고숙련 훈련 지원

- 여성 리턴 아카데미

적합 일자리수요 발굴
(의료무역 분야 등)
⋮
채용 전제로
기업 현장훈련
▼
채 용

##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 확대

Job engine

- 의료서비스, 관광 문화 분야 등
- 전문직종 직업훈련 확대 ('13년 20개 → '14년 40개)
  * 폴리텍대학 등 활용
-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

## 경력단절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

- 취업 無경험자
  - 상담 → 훈련 → 취업알선
- 취업 有경험자
  - 상담 → 취업알선
- 즉시 취업가능자
  - 즉시 취업알선

# 전략 7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

## 시간선택제 활성화

- [공공] 공무원 4천명, 공공기관 9천명 채용 (~17년)
- [민간] 고용상 불이익 방지
  - 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배포 등
-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구축 (3월)

## 유연근로 확산

-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
  - '14년 신규 2개소, 단계적 확대
  - 스마트워크 매니저 양성, 기업 컨설팅 등
-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 마련 ('14.상)
  - 유연근무제도, 인프라, 관행 개선

## 기업 부담 경감 지원

- 민간 대체인력뱅크 시범도입
- 대체인력지원금(중소/대기업: 월 60/30만원)
- 양질의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지원 강화
  -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
  - 인건비 지원 확대 (월 60 → 80만원)
- 기업지원 안내서 배포 (2월), 컨설팅 (4월)

## 기업 문화·인식 개선

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유도 컨설팅 후 명단 공표 ('15.1월)
- 기업 우수사례 확산 (관계부처 협업)
- 유연근무제 사용 분위기 조성
  - •홍보→ 컨설팅→ 사업장 감독

정책목표 3

# 저소득층, 일을 통한 복지 확충

- 전략 8 고용·복지 융합서비스 조속한 확산
- 전략 9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
- 전략 10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

# 주요 성과

## 고용·복지 연계 지원

- **고용·복지 융합형 전달체계 모델 정립**
  - '14.1월 남양주에 제1호 고용복지 종합센터 개소

- **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실시** (9월)
  -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고용센터에서 우선 취업 지원 (53개 시군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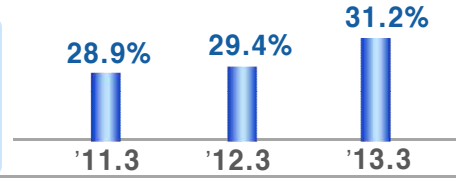
- **16개 일자리 정보 연계 완료 ➡ 통합 제공**

| | |
|---|---|
| 중앙정부 | 워크넷(고용부), E-새일시스템(여성부) |
| 자치단체 |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일자리 정보망 |
| 민간기관 | 잡코리아, 사람인, 인크루트 등 |

##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

- **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**
  (보험료 지원수준: 보험료의 1/2~1/3 ➡ 1/2)

1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




- **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신설** (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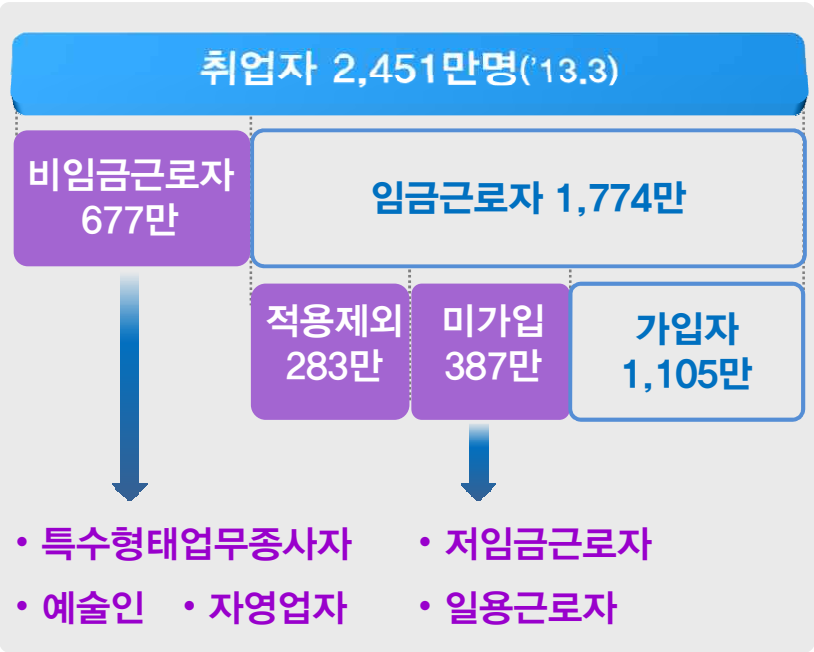
##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

- **합리적 최저임금 결정** ('14년 7.2% 인상)
- **임금체불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시행**
- **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**
  - 6만5천명 ('13~'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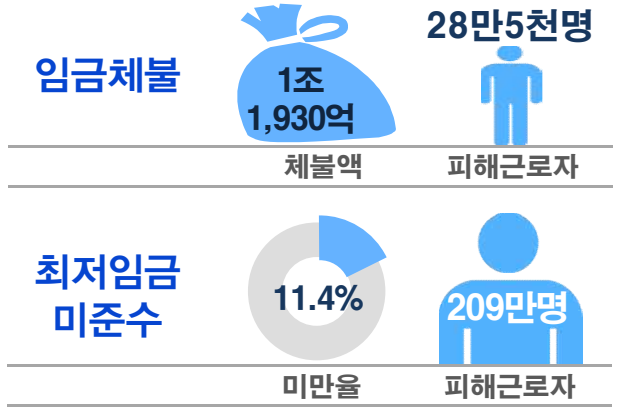
# 장애 요인

- 남양주 이외의 지역은 고용·복지 **서비스기관 산재**에 따른 국민불편 여전

- **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제도로** 인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보호에 **한계**




- **고의·상습 체불** 사업주에 대한 **낮은 수준의 제재** 등으로 **법 위반 관행 여전**




  - 피해근로자 생계보호 미흡
    - 체불근로자 중 체당금 지원 비율: 16.9%

- 전체 산재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**대규모 사업장 내 하도급업체 사고 빈발**
  - 정비, 보수 등 **위험 작업**의 외주화 증가, **원청**의 **안전관리 책임 소홀** 등 복합작용

# 중점 추진계획

## 전략 8 고용·복지 융합서비스 조속한 확산

### 고용·복지 종합센터 대폭 확대

- ’14년 10개소 ➡ ’17년 70개소
  - 기재·안행·복지·여가·미래·문화부, 지자체 협업
-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 병행

고용 서비스 + 복지 서비스 + 문화 + 창조 경제

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등 / 무한 상상실 등

### 남양주센터를 표준모델로 정립

공간 등 하드웨어 +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

연계·통합

- 합동 업무계획 수립
-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
-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

###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(통합사례 관리)

아이돌보미 (복지지원팀)

배우자 안정적 일자리 지원 (지자체 일자리센터)

35세, 여

- 실직, 남편 일용직, 자녀 양육

실업급여 지급 (고용센터)

수납전문가과정 재취업 훈련 (새일센터)

# 전략 9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

## 5대 사각지대 해소

| 1 특수형태업무 종사자(44만) | 2 예술인 (5,500명) | 3 영세 자영업자 | 4 가입누락 저임금근로자 | 5 일용근로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규 적용 | 신규 적용 | 보호 강화 | 보호 강화 | 보호 강화 |
| 6개 직종 적용검토<br>· 보험모집인,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(노사정 논의 중) | 예술인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<br>· 자영업자와 같이 임의가입방식 검토 | 가입요건 완화<br>· 사업자등록 후 6월 이내 가입 ➡ 1년 이내<br>특화 훈련 개발, 훈련 참여수당 지급 |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<br>· 신규가입자 우대 방안 마련<br>· 지원대상 · 내용 등 확대 | 모바일 앱기반 신고제도 도입(6월)<br>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<br>·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신청 ➡ 실업 시 신청 |

**일 할수록 유리하게 실업급여 제도 개선** | **부정수급 예방·점검시스템 강화**

# 전략 10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(비정상의 정상화)

## 기초고용질서 확립

###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

-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도 소액체당금 신속지원
-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
  현행 퇴직자 ➡ 재직자 포함

### 고의·상습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

- 체불임금 배액 배상 제도 신설
-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대
  • 현행 퇴직자 ➡ 재직자 포함
- 공공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

##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

###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
('14년 2만명 전환, 비정규직 반복사용 관행 근절)

###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 시행
('14.上, 300인 이상 2,960개 사업장)

###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제한

## 중소하도급업체 근로자 안전 강화

### 유해·위험 작업 외주화 제한

- 불산·황산 취급작업 등 도급이 제한되는 대상 추가('14.하)

###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

-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
  (대상장소: 16 ➡ 20개소, '14.상)
- 법 위반시 원청업체 벌칙 강화 ('14.하)

정책목표 4

#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

## 전략11 사회적 대화를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

#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

경제·사회 환경 변화

- 저출산·고령화 ➡ 잠재성장률 저하, 생산가능인구 부족
- 글로벌 저성장 ➡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
-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➡ 계층·세대·이념 간 갈등 심화

##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

### 불합리한 제도

- 복잡한 임금구성, 연공급 등 경직적 임금체계
- 전일제·남성 위주 장시간근로
-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조기퇴직
- 협소한 고용안전망

### 비정상적 관행

- 기초고용질서 위반
  - 임금체불 관행 지속 등
- 일부 노사의 법 위반 지속
  - 부당노동행위, 불법파업
-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

### 비생산적 노사문화

-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
  -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미성숙
- 노사의 사회적 책임 부족
  - 청년 등 구직자, 비정규직, 중소기업 배려 부족

| | |
|---|---|
| 일자리 부족 | 여성·고령자 등 노동시장 참여 저조 |
| 노동시장 격차 심화 | 생산성·경쟁력 약화 |

# 중점 추진계획

## 전략11 사회적 대화를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

### 新고용노동시스템

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가능한
효율적 노동시장

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
열린 노동시장

다 함께 상생하는
공정한 노동시장

#### 노동시장 제도 개혁

**임금체계 개편**
- 임금구성 단순명확화
- 직무가치·능력의 공정한 반영

**장시간근로 개선**
- 일자리 나누기, 생산성 제고

**고용안전망 확충**
-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 확대

#### 일하는 방식·문화 개선

**다양한 근무형태 확산**
- 재택근로, 스마트워크, 시간선택제 등
- 인사노무 컨설팅

**범국민 인식전환 캠페인**
- 2.18일 대국민 선포식 "일家양득"
- 100개 기업·단체 참여 및 선도

**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정비**

#### 불합리한 관행 개선

**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, 차별시정 강화**

**'법과 원칙' 준수**
(부당노동행위, 불법파업 엄단)

**공공기관 정상화**
- 임금체계 개편, 노사상생 추진, 갈등 최소화
  → 고용부 산하기관(12개) 선도

# 전략11 사회적 대화를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

-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
  - 임금체계·근로시간 혁신
  - 생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

- 지역노사민정협의회
  - 지역 일자리 창출, 공동 인력양성 등 고용·노사관계 거버넌스 기능
  - 지역단위 협력 선언, 협약 체결
- 업종별 대화 채널 구축
  - 자동차, 보건, 공공 등

## 청년·비정규직 등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

-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·의제 확대 등
- 노사협의회 참여 활성화 (파견·사내하도급)
- 정책과정의 다양한 사회주체 참여

올 한해,

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실천에 매진하여

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

만들어 내겠습니다!